

오바마, 그린에너지 지원 “적신호”

실리콘밸리 태양에너지 성장세 주춤 ... 경기회복 전까지 투자 위축

미국 정부의 세금공제 혜택 등을 받고 있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언급해온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태양에너지 사업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각광받아왔지만 자금난과 기술개발의 어려움이 겹쳐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1월21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인근에 위치한 태양에너지 기업인 옵티솔라는 벤처투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직원 290명을 해고했다.

벤처투자그룹인 제인 캐피털 파트너스의 창업주 닐 다이커먼은 “태양에너지가 미래 성장산업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을 수차례 언급해 왔으나 기술 개발과 벤처투자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2008년 태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기업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기업들은 미국시장의 청정에너지 수요가 계속 확대될 수 있을지 낙관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난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청정에너지 전문 분석기관인 클린에지는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신용시장의 경색이 풀릴 때까지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리콘밸리 기업 아키나솔라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자금 조달이다.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싶어도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정부가 관련 기업에게 세금공제 혜택과 함께 태양열 설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2>